



# 국제환경규제 현황과 대응지원 정책



김 승 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02-2110-6557 seunghee-kim@me.og.kr

<필자약력>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95. 10~'05.10 : 환경부 지구환경과, 정책총괄과, 수질정책과,  
공보관실, 장관실, 대기정책과

-'06.11~현재 :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국제환경규제 현황

최근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분야에서 제품설계 단계부터 생산 및 사용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자동차에 대해서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등 4개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차량 폐차 시에는 이를 재활용토록 의무화하는 폐차처리지침(ELV)을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전자 제품에 쓰이는 납, 카드뮴, 수은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규제 지침(RoHS)을 도입하였다.

2007년 6월부터는 화학물질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역내에 유통되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우리의 주요 통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제입법을 '07년 3월 완료하였다. 일본 또한 가전 리사이클법('01), 자동차 리사이클법('04) 등 관련 리사이클법을 시행하고 있고, '06년 7월에는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정보 제공



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입법은 아직 없으나,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3) 및 휴대폰 리사이클링법('04) 등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규제는 제품에 대한 직접규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로 연계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EU는 2011년부터 역대 모든 항공기에 CO<sub>2</sub>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2년까지 자동차 CO<sub>2</sub> 배출량을 13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U에서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는 2004년 대 EU 수출액 378억 달러중 267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액 감소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 및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REACH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제품에 국한된 ELV나 RoHS와는 다르게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의 연구결과 REACH 대응비용이 약 9천3백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영국과 화학산업 규모의 유사성, 언어 및 지리적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 1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EU가 추진하는 항공부문의 CO<sub>2</sub> 배출권 거래제, 자동차 CO<sub>2</sub> 배출량 규제가 도입되면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EU지역 왕복항공권당 가격이 25~127 유로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가 CO<sub>2</sub>를 대당 170g/km를 배출하는 점을 고려할 때 EU가 2012년 도입하는 130g/km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 향후 대응 및 산업계 지원방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능력은 미흡하다. 특히 REACH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하여는 상당수의 기업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다른 기업의 대응동향을 관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U의 REACH 도입으로 EU 수출기업은 당장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제품내 화학물질의 성분·함유량, 유해성정보(60여개) 등을 사전 등록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화학물질 정보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도 온실가스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도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걱정이 많다. 대기업에 비해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과 정보력이 부족하고, 대응 기술의 개발·적용을 위한 자본력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의 친환경 납품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환경 규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환경 정보시스템(www.ten-info.com)」을 구축·운영 중이다. 「무역·환경정보시스템」은 지난해 총 545여건의 무역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환경규제 동향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금년 말까지 정보제공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까지 포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금년 4월에 제정·공포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ACH 대응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과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업계의 인식제도와 등록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함께 REACH에 집중적으로 영

향을 받는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07.4.30~5.7)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REACH 법안 발효에 맞추어 당장 준비해야 하는 사전등록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CEO 등 산업계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사전등록방안” 사례연구, “등록서류작성 시범사업”,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생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선 저공해 차량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기후변화적응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